

2019년 5월 2일  
한반도선진화재단

# 민주노총의 이기적 횡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?



신문명정책연구원대표 장기표

# 1. 민주노총의 현황 (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)

- 조합원 수 99만 5,861명, 전체 임금근로자의 5.1%  
(2017년 말 78만 6,563명 → 20만 9,298명(26.6%) 증가)
- 정규직의 노조가입률 12.7%, 비정규직 노조가입률 1.9%
- 한국노총 조합원 수 101만6천여 명  
(2018년 2월 97만 5,574명에서 4% 이상 증가)

민주노총 전체	99만5,861명
전국공공운수노조	20만8,910명
전국금속노조	17만6,343명
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	14만2,283명
전국공무원노조	9만5,948명
전국서비스노조연맹	8만1,947명
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	6만8,921명
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	6만6,288명
전국교직원노조	5만10명
기타	10만5,211명

## 1. 민주노총의 현황 (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)

-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연봉 7천4백만 원(월급 620만 원)  
(자동차·금융·전자·정유·언론 등의 평균 연봉은 1억 원 가량)

노동자 전체의 평균임금 : 연봉 3,591만 원(월급 299만 원)

- 2018년 최저임금 153만 원 이하의 노동자 311만 명
- 실업자 103만 명, 구직단념자 51만 명, 실망실업자 250만 명  
(청년실업률 9.5%, 청년체감실업률 25%)

## 2. 민주노총의 문제점

-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투쟁 주도

▶ 기득권집단의 이기적 요구임.

다른 근로자의 임금은 2분의 1 ~ 3분의 1

최저임금(2018년) 153만 원에 못 미치지 근로자 311만 명

이기적 자본주의에 매몰 노동이념의 이념 상실 -노동운동이 아님

## 2. 민주노총의 문제점

- 소득양극화와 임금격차 조장
  - ▶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인상  
→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 저하.
- 인력운용 자율성 저지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 
생산성이 저하됨
  - ▶ 현대자동차 근로자 평균연령 48세(2003년 38세), 현대중공업 50세

민주노총의 고임금으로 대기업 공산품 가격 인상

## 2. 민주노총의 문제점

- 무소불위의 권력집단 - 대통령과 장관, 국회의원 등에 군림

- ▶ 대통령이 참석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창립회의  
→ 민주노총 불참으로 회의 공전.
  - ▶ 민주노총 참여를 위해 경사노위 출범 6개월 미룸  
→ 국정운영 차질. 그러나 끝내 참여하지 않음.

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위해 회의 정족수 미달 - **비겁한 행동**

## 2. 민주노총의 문제점

- 민주노총의 과도한 임금과 과격한 투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  
▶ **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**  
“민주노총 때문에 기업 못하겠다”는 말이 도처에서 나옴.

구매력 기준 노동자 5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월 평균임금  
미국 4736달러, 일본 4079달러, 프랑스 5238달러, **한국 6097달러**

## 2. 민주노총의 문제점

- 공권력의 무력화 - 정부의 책임이 큼
  - ▶ 노동조합의 진정과 고발  
→ 정부기관과 경찰 신속하게 처리.
  - ▶ 근로자의 횡포와 불법행위 고발  
→ 수수방관하는 경우 많음.



한노총 소속 작업자 고용하자  
민노총 “우리도 더 뽑아라”  
공사중단, 교통마비 등 주민과 공사업체 큰 피해  
<2019년 4월 24일 문화일보>

불법적인 이권개입 - 기업경영진에 청탁, 공사입찰 개입

## 2. 민주노총의 문제점

- 최대의 기득권을 누리면서도 기업 경영자나 정부에 요구할 뿐  
• 자기들이 양보하는 일은 없음. **집단이기주의의 극치**

- ▶ ‘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라’, ‘비정규직을 없애라’,  
‘청년실업을 없애라’, ‘탄력근로제를 없애라’ 외치는데,

민주노총 때문에 저임금이 상존하고  
비정규직이 없어지지 않으며..

**청년실업이 늘어남**

- 외국의 사례

- ▶ 미국의 GM 1987년 70만 명에서 1992년 35만 명으로 줄였으나 파업 없음.
- ▶ 폴크스바겐 2020년까지 3만 명 감축 합의.
- ▶ 스웨덴 볼보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3500명 감원.

### 3. 과도한 임금인상요구 배경

- 내 것 없으면 못 사는 나라, 사회보장제도의 미흡.
-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 
같은 임금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과 남는 사람 있음.  
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의 파업에 남는 사람도 동참.

정리하고 돼도 살아갈 대책이 있어야 함.

### 3. 과도한 임금인상요구 배경

- 대기업 임원의 과도한 연봉 - 주식배당은 별도
- 재벌회장의 과도한 임금

주요 그룹 오너 연봉 (단위=억원)

이름	기업	직책	2018년 보수	2017년 보수
이웅열	코오롱	前 회장	455	55
이재현	CJ	회장	159.9	-
김택진	엔씨소프트	대표	138.3	62.2
조양호	한진	회장	107	66.4
이해욱	대림	회장	103	20
정몽구	현대차	회장	95	80
손경식	CJ제일제당	회장	88.7	-
신동빈	롯데	회장	78	152
허창수	GS	회장	78	73
최태원	SK	회장	60	20
서경배	아모레퍼시픽	회장	30	109
정의선	현대차	수석부회장	29	18

주요 그룹 전문경영인 연봉 (단위=억원)

이름	기업	직책	2018년 보수	2017년 보수
권오현	삼성전자	회장	70.3	243.8
우유철	현대제철	부회장	67.3	9.7
김봉영	삼성물산	고문	48.7	17.2
김기남	삼성전자	부회장	45.3	-

\*보수에는 퇴직금도 포함. 자료=금융감독원 전자공시



## 4.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옹호

-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(2018년 16.4%, 2019년 10.9%)에 대해  
    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'속도조절'을 내세웠다가  
    → 민주노총이 두려워서 포기함
- 정치권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해도  
    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기다려 연기되고 있음
- 민주노총 조합원 횡포에 정부의 소극적 대응.

## 5. 민주노총의 횡포에 대한 대처방안

### 단기 대처방안

- 민주노총을 노동자 대표로 인정해서는 안 됨
  - ▶ 민주노총 조합원 99만 5,861명, 전체 근로자의 5.1%  
전체 노동자 대표할 수 없음.
  - ▶ 경제사회노동위원회, 중앙노동위원회,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 배제

민주노총의 불법행위 엄단해야 함

## 5. 민주노총의 횡포에 대한 대처방안

### 단기 대처방안

- 대기업 경영자들 민주노총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불응해야
- 민주노총의 잘못된 행태 옹호하는 진보지식인의 각성 촉구

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횡포 묵인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함

## 5. 민주노총의 횡포에 대한 대처방안

### 근본적 대처방안

- 노동자에게 부여된 파업권 폐지해야 함
  - ▶ 자본가에 비해 노동자의 힘이 현저히 약할 때  
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있어야 했음.  
지금은 근로기준법은 두되, 노동조합법 폐지해야 함

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노사관계가 정립되어야 함

## 5. 민주노총의 횡포에 대한 대처방안

### 근본적 대처방안

- 노동자에게 경영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옳음
  - ▶ 과도기적으로 경영권을 자본(주식)에 70%, 근로자에 30% 보장
  - ▶ 노사분규 없애고 노동생산성 높이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.
- 임금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 돼야

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 건설  
아니면 대량실업 소득양극화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로 사회 붕괴 인생 파탄

**국가운영방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함**



감사합니다  
[www.weldom.or.kr](http://www.weldom.or.kr)